

# 제명까지 갈 수 있을까...국회 5·18망언 3인방 징계 착수

18건 윤리특위 일괄 상정  
4월 9일까지 심사위 자문  
첫회의 '제명' 스티커 충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해충돌 논란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등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윤리특위 박병재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21건 중 2건(김도읍·조원진)은 (징계요구사항 경과로) 종결처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 풍자에 관한) 표창원 의원 건은 징계심사 소위로 넘기기로 했다"며 "18건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며 4월9일까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개월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윤리위에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한다.

또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을 구하면서 18개 안건 중에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으면 윤리위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5·18망언 3인방과 손혜원·서영교 민주당 의원건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자문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도록 맡겼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5·18 망언' 의

원 건의 우선 처리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건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와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윤리특위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특히, 윤리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특위에서 5·18 망언 의원 3인방의 징계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18 망언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올라온 다른 안건과 명백히 다르다. 헌법정신 훼손을 다루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전의를 다졌다.

이어 오후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각 노트북에 붙인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표시를 하는 것이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노트북 앞에 표시된 것을 떼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일종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는 이 자리에 와서 무조건 제명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위성근 의원은 "(윤리위 회부된 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분명 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박 위원장이 피켓 제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회법상 위원장이 떼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피켓을 떼지 말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양쪽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보다 못한 박병재 위원장은 회의가 열리지 1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중 미세먼지 비상조치·인공강우 실험 공동 추진

환경부 긴급조치 강화 방안  
석탄발전 상한제약 확대  
살수차 등 저감 수단 총동원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

범설치로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괄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원-원'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늘 7개 부처 개각...현역의원 입각 줄어든 듯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대 7곳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가 7일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 입각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며 8일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민주당 박영선·진영·우상호(3선) 의원 등을 놓고 문 대통령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3명 모두 입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의원 입각이 이뤄지더라도 많게는 2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7명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그 가운데 3명을 정치인 출신으로 채운다는 것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인사정문화

도 염두에 뒤야 한다. 그동안 '의원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 낙마 사례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정부내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한층 더 높아졌다. 결국 사유가 발견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다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언론들이) 정치인 세 분에 대해서 거의 단수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 하던데, 그렇지 않다"며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우상호 의원 외에 노무현정부 당시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진 의원 외 김병섭 서울대 교수와 정재근 전 행안부 차관 등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번 개각에선 이 외에 통일·국토교통·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일부 장관은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이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현 차관,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다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4선인 변재일 의원이 앞서 거명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나 관료 출신 인사가 기용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지금회수가**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1566-9988

##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